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한
노인부양가구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요 약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라 초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고령화 정책이 지속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인부양 부문에서는 독거노인가구뿐 아니라 노인부양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이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들에 대한 부양자들의 심적, 물적 부담 가중 문제를 더욱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정책의 수요자인 노인부양가구는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하며 덜 선호하는지,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것은 확실적인 정책 공급을 지양하여 미시적이고 세밀한 정책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러한 가구 특성에 따른 노인부양정책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최근 새로운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자칫 삶의 근로 동기를 소실하게 할 수 있는 지나친 맹목적 정책 지원을 지양하기 위하여 최대한 균형적 시각을 견지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서울시로 설정하고, 서울시복지패널 가구용 2차 본조사 데이터(2010)을 분석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또한 선호도로 측정된 리커트형 척도 종속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을 위하여 순서형 프로빗 회귀 분석을 연구방법론으로 차용하였다.

11개의 노인부양정책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먼저,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각 독립변수가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정책 수립 및 집행 시 이를 분명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각기 다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은 선호되기도 하고, 또 다른 정책은 덜 선호되기도 하는 등, 선호도의 차이가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확실적인 정책 공급이 최대한 지양되어야 함과 동시에 최대한 미시적인 방향이 견지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이들의 선호도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지역적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집행을 통해 이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앙정부는 지원과 감독 의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정부와 단체 이하 세부기관은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중앙집권적이고 확실적인 정책 집행은 자연히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어느 특정 정책의 선호도가 통념과는 다른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공되는 정책 서비스의 효과성 측면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정책의 수요자에 정확히 정책이 도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느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지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한 정확한 성과 사후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기초수급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정도의 정책 요구도(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초수급가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생활 능력이 뒤처지므로 이에 따라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단, 무분별한 지원에 의해 삶의 근로 동기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사용을 반드시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 역시도 성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별 패턴의 변동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독립변수는 가구 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정책의 선호도는 가장 비일관성을 띠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책 수립 및 제공 시 가구 유형과 이에 대한 선호도를 분명히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구는 실질적으로 주거 및 생계 등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삶을 함께 하는 최소한의 단위이므로, 이러한 가구의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미시적 정책의 기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생각하면 복지 서비스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어야만 하는 통념 역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개인 단위의 미시적 선호를 모두 아우르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민간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 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며, 복지서비스도 엄연히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재화의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언급되는 이상적 상태 하에서의 경쟁인 완전경쟁이 현실적으로는 달성되기 어렵지만, 정부, 시장, 국민으로 대변되는 삼면 경제 주체가 각기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사회정책 서비스의 시장경제원리는 충분히 달성될 여지가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는 지나친 개입보다는 시장경제원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선호도를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 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의 역할 수행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사회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최대한

미시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이러한 미시적 정책 서비스
스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움을 해소할 있는 대안적 측면에서 경쟁의
원리가 바탕이 되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도입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